

Market Issue

미중 정상회담: 빅딜보다 중요한 것은 ‘안정’

- 5월 정상회담이 미중 관계의 ‘전략적 안정’ 틀을 만든 자리였다면, 이번 회담은 관세·농산물·항공기·희토류 등 기존 합의의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성격
- AI는 새로운 협의 영역으로 부상했지만, 첨단반도체와 대만에서는 기존 입장 차이가 지속돼 관계 전반의 개선보다는 ‘관리되는 경쟁’ 기조 유지 여부가 핵심
- 지수보다 정책 변화에 주목. 관세·희토류 공급 안정과 AI 협의 확대,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 변화가 업종별 핵심 변수

베이징에서 워싱턴으로: 5월에는 합의, 9월에는 이행을 확인

지난 5월 14~15일 베이징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개별 합의보다 양국 관계의 방향을 ‘건설적·전략적 안정(constructive strategic stability)’으로 설정한 것이었다. 패권 경쟁을 해소하기보다 충돌 위험을 관리하면서 경제·통상 분야의 협력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당시 양국은 미중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 설립에 합의했으며, 미국은 희토류·핵심광물 공급 문제와 농산물·보잉 항공기 구매를 주요 성과로 발표했다. 중국 역시 당시 회담을 향후 3년 이상 미중 관계를 이끌 새로운 전략적 안정의 틀로 설명했다.

4개월이 지난 현재 평가 기준은 달라졌다. 5월의 질문이 ‘합의할 수 있는가’였다면, 9월의 질문은 ‘합의를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가’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6월 무역위원회의 운영방식과 관세 조정 대상이 될 비민감 품목에 대한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무역위원회가 선언 단계에서 실제 제도 설계 단계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반면 이행 속도는 고르지 않다. 대미 대두 수입은 1~8월 누적 감소했지만 6~8월에는 전년 동기대비 21% 반등했고, 보잉 항공기 200대 구매도 일부 주문 절차가 진전되고 있다. 반면 투자위원회는 국가안보와 기술 이전에 대한 양국의 경계로 진척이 상대적으로 더디다. 결국 워싱턴 회담의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새로운 약속의 크기보다 베이징 합의가 얼마나 실행 단계로 넘어가는가다.

표 1. 5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협상 타임라인

시기	주요 내용 및 체크포인트
5월 14~15일	· ‘건설적·전략적 안정’ 관계 설정 - 갈등 해소보다 관리 체계 구축에 초점. - 무역위원회·투자위원회 설립. 교역 확대 및 희토류 공급 안정 등 논의
6월	· 무역위원회(Board of Trade) 구체화 - USTR, 비민감 품목 및 관세 조정 대상에 대한 의견 수렴 시작
7월	· 미국, 중국 포함 60개 경제권에 무역법 301조 추가관세 부과 - 중국산 상품에 12.5% 추가관세(일부 품목 면제) - 중국, 대중 대체 추가관세 20% 상한 약속 준수 요구
8월	· 통상 마찰 지속 - 중국, 미국의 ‘과잉생산’ 관련 추가 관세 검토에 반대
9월 20일	· 사전 고위급 협상(뉴욕) - 기존 합의 이행, 무역·투자 확대, AI 문제 별도 협의

자료: 백악관, 중국 상무부, 언론 종합,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여기에 하나의 상징적 변화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진핑 주석은 9월 23~25일 미국을 국빈 방문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적인 백악관 영접을 넘어 앤드루스 합동기지까지 직접 나가 시 주석 부부를 맞을 예정이다. 24일에는 479명의 미군 병력이 참여하는 공식 환영행사와 국빈만찬도 예정돼 있다. 높은 수준의 의전은 양 정상에 관계 안정에 부여하는 정치·외교적 가치를 보여주지만, 이를 곧바로 통상·기술 분야의 정책 양보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의전의 격과 협상의 실질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이 원하는 것은 ‘빅딜’보다 안정

중국 관영매체가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강조하는 키워드는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建设性战略稳定关系)’다. 지난 5월 양국이 협력을 유지하면서 경쟁과 이견을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 통제하는 방향에 공감했다면, 이번 회담에서는 이러한 틀을 재확인하고 후속 협의를 이어가는 데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기대하는 것도 전략 경쟁의 해소보다는 고위급 소통을 유지하고 통상·기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에 가깝다. 중국 외교부 역시 이번 방미를 앞두고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이견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전략적 안정 관계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정상회담 직전인 9월 20일 뉴욕 경제·무역 협상에서도 양측은 기존 합의 이행과 무역·투자 확대를 논의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 역시 대규모 포괄 합의보다 기존 합의의 이행, 추가 규제 확산 방지, 새로운 대화 채널 구축 여부가 주요 확인 사항이다.

표 2. 5월 베이징 합의 이행 점검표

구분	세부 의제	5월 합의·논의	9월 점검 포인트
통상·제도	미중 무역위원회	양국 간 지속적 교역 관리 체계 구축	운영체계 공식화 및 관세 조정 대상 품목 구체화
	미중 투자위원회	비민감 분야의 상호 투자 확대 추진	국가안보 심사와 투자 확대 간 실질적 절충 여부
	관세	비민감 품목 중심의 상호 조정 추진	관세 안정 기조의 기간·대상 확대 여부
실물교역	농산물	미국산 농산물 연간 최소 \$17B 구매(대두는 별도)	실제 구매 속도 및 추가 구매 확대 여부
	항공기	보잉 항공기 200대 구매 약속	실제 주문 확정 및 인도 일정
	에너지	미국산 에너지 구매 확대 논의	관세 조정 및 실제 구매 확대 여부
공급망	희토류·핵심광물	안정적 공급 필요성에 공감	수출허가·품목·기간 등 공급 안정의 구체성
기술	AI	공식 성과에는 별도 합의 미제시	AI 사고 통보 체계 및 거버넌스 채널 신설 여부
	첨단반도체	미국의 대중 수출규제·중국의 기술자립 기조 유지	첨단 GPU·반도체 장비 규제 강도의 변화 여부
외교·안보	대만	양측 기존 입장 유지	새로운 합의보다 정책·표현의 변화 여부
		- 중국: 핵심이익 및 레드라인 원칙 불변 - 미국: 하나의 중국 정책 및 현상 유지	

자료: 백악관, USTR, 중국 상무부,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I, 새로운 협상 의제로 부상

이번 회담에서 새롭게 볼 부분은 AI가 미중 간 공식 경제 협의의 대상이 됐다는 점이다. 중국 측은 디지털경제와 AI를 양국 간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는 미국의 첨단 GPU나 반도체 장비에 대한 대중 수출규제가 단기간에 크게 완화된다는 의미와는 구분해야 한다. 중국 측이 강조하는 것은 AI 거버넌스와 산업 활용, 관련 규칙에 대한 대화이며 첨단반도체와 핵심기술은 여전히 구조적 경쟁 영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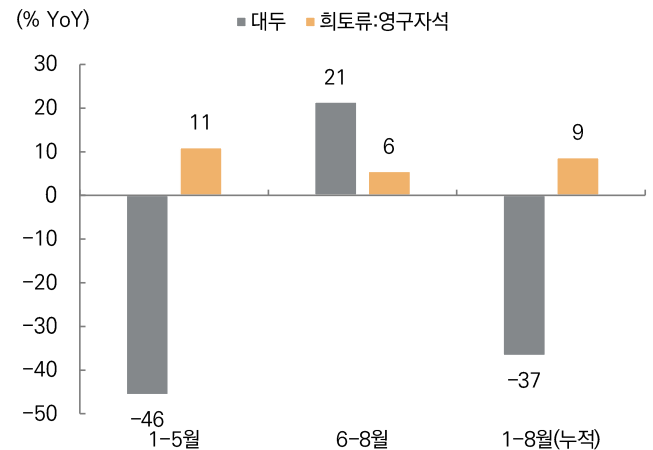
9월 협상에서는 미국 측이 중대한 AI 사고 발생 시 상대국에 알리는 'AI 사고 통보 체계'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 패권을 공유하자선 접근이라기보다 경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위기관리 채널에 가깝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는 GPU 규제 완화 여부와 함께 AI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상설 대화 채널이 만들어지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뉴욕에서 만난 베센트-허리핑



자료: AP News

그림 2. 중국의 대미 대두 수입 및 희토류 수출 증가율



주: 물량 기준, 각 기간은 전년동기대비. 2025년 9~12월 대미 대두 수입은 0
자료: 중국 해관총서, Wind,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합의 가능 영역과 구조적 갈등의 경계

통상에서는 현재의 안정 기조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농산물·에너지·항공기 등 정치적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에서는 추가 합의의 여지가 있다. 희토류 영구자석 수출은 통제에도 1~8월 누적 증가했다. 수출통제가 전면적인 물량 축소보다 허가를 통한 선별적 관리라는 점을 보여준다. AI 거버넌스 역시 새로운 협력 영역으로 떠올랐다.

반면 대만과 첨단기술에서는 입장 차가 뚜렷하다. 중국은 대만을 핵심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첨단 GPU·반도체 장비에서는 미국의 대중 규제와 중국의 기술 자립 전략이 맞고 있다. 이들 분야에서는 새로운 합의보다 추가 제재와 갈등 확산을 방지하고 고위급 소통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보다 현실적인 판단 기준이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은 모든 갈등의 해소보다 합의 가능한 영역과 구조적 경쟁 영역을 구분하고, 전자의 협력 범위를 얼마나 넓힐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에 가깝다.

시나리오별 전망: 회담 결과보다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확인

Base: 전략적 안정의 연장

새로운 대형 합의보다 5월 이후 형성된 관계 관리 틀이 유지되는 경우다. 관세·희토류 갈등이 재확대되지 않고 무역위원회와 AI 후속 협상이 이어지는 한편, 첨단반도체와 대만에서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 이 경우 미중 관계는 ‘관계 개선’보다 ‘관리되는 경쟁’(managed competition)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시장에도 새로운 성장 동력보다는 갈등 재확산 위험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Bull: 경쟁 관리에서 협력 제도화로

관세 조정 대상과 규모가 구체화되고 희토류 공급 안정, AI 사고 통보 체계 등에서 실제 제도적 진전이 나타나는 경우다. 여기에 보잉·농산물 구매가 확대되면 5월 합의가 실제 교역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의미가 커진다. 시장의 초점도 지정학적 위험 완화에서 교역·설비투자·기업실적 효과로 이동할 수 있다.

Bear: 추가 관세와 갈등 재확대

관세·희토류 협상이 후퇴하거나 대만·첨단기술 갈등이 확대되는 경우다. 미국은 이미 강제노동 관련 301조로 중국산 상품에 12.5% 추가관세를 부과(일부 품목 면제)했고, 구조적 과잉생산에 대한 301조 조사도 진행 중이다. 협상 후퇴가 추가 관세로 이어질 경우 관세 → 공급망 → 상품가격 → 물가·금리 → 기업이익 경로의 불확실성이 재확대될 수 있다.

표 3. 미중 정상회담 시나리오별 주요 변화

구분	체크포인트	Base(전략적 안정)	Bull(협력 확대)	Bear(갈등 재확대)
통상	관세·교역	현행 안정 기조 유지, 무역위원회 후속 협상 지속	관세 조정 대상·규모 구체화, 농산물·항공기 구매 확대	관세 협상 지연 또는 추가 조치 가능성 부각
공급망	희토류·핵심광물	기존 공급 안정 원칙 재확인	수출허가·공급 기간 등 구체적 합의 진전	수출통제 및 공급 불확실성 재부각
기술	AI·첨단반도체	AI 대화 지속, 반도체 규제는 기존 틀 유지	AI 사고 통보 체계 등 상설 협의체 구체화	AI 협의 진전 제한, 첨단기술 규제 강화 가능성
외교·안보	대만 등	기존 입장 재확인, 추가 갈등 억제	긴장 완화성 표현 및 고위급 소통 강화	양측 발표문 차이 확대, 대만·안보 갈등 재부각
시장 판단	핵심 변화	갈등 재확산 위험 완화 지속	위험 프리미엄 완화 → 교역·실적 효과 확인	공급망·물가·금리 경로의 불확실성 확대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지수보다 업종별 정책 변화에 주목

이번 정상회담은 지수 방향성보다 관세·공급망·첨단기술 정책의 변화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다. 관세 안정과 희토류 공급이 이어질 경우 관련 산업의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AI 협의의 제도화와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 변화가 핵심이다. 중국 AI·반도체의 기술 고도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반도체는 대중 규제 유지 시 중국 첨단 생산의 제약 지속 여부와 규제 완화 시 경쟁 강도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